

해명자료

문의 : 네트워크정책국 네트워크윤리팀장 엄 열(☎750-2760)
네트워크윤리팀 박승철사무관(☎750-2735) psc2285@kcc.go.kr

정부, '긴장상황'때 인터넷글 무단삭제 추진한 적 없어

'10. 12. 22.(수) 『정부 '긴장상황'때 인터넷글 무단삭제 추진』 기사 (한겨레 2면 종합)와 관련,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바로 잡습니다.

□ 보도 내용

한겨레 신문은 "정부가 긴장상황때 인터넷글 무단삭제를 추진하고 인터넷자율기구와 포털업체의 관계자들과 매뉴얼에 대한 협의까지 마쳤으며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마저 크다"라고 보도함

□ 해명 내용

- 정부는 무단으로 인터넷글을 삭제할 수 없으며 이를 추진한 바도 없습니다.
- 현재도 포털 등 인터넷사업자는 명백한 허위사실 및 유언비어 게시글에 대한 삭제 등 자율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
- 정부는 향후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긴장상황 발생시 명백한 허위사실 및 유언비어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인터넷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조치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.
※ 명백한 허위사실(예) : 연평도 포격시 '예비군 동원령 발령' 휴대폰문자 및 게시물
- 관련 매뉴얼은 없으며, 인터넷자율기구와 포털업체 등과의 매뉴얼 작성과 관련된 협의도 없었습니다. 끝.